

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, 국민의 해양경찰

제1차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[2024~2028]



2024. 3.

해 양 경 찰 청

목 차

I. 수립배경	1
II. 국내 수상레저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	2
1. 국내 수상레저 현황	2
2. 해외사례 분석	7
III.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체계	9
IV. 전략별 추진과제	10
1.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안전정책 추진	10
① 규제정비를 통한 수상레저 활성화	10
② 수상레저기구 KC안전인증 개발 및 법제화	11
③ 수역별·기구별 특징을 반영한 운항규칙 세분화	12
④ 수상레저 자율점검체계 마련을 위한 우수사업장 지정	13
2. 초연결 사회 그리고 참여·협력 네트워크 강화	14
⑤ 민·관 협력 수상레저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	14
⑥ 내수면 지원센터 확충 및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	15
⑦ 「수상레저 대제전」 개최를 통한 저변 확대	16
⑧ 수상레저안전 관련 단체 협업 강화	17
3. 스마트 시대 그리고 국민편의 증진	18
⑨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	18
⑩ 수상레저안전 종합정보제공 모바일 앱 개발	19
⑪ 조종면허 전자채점 시스템 도입	20
⑫ 조종면허시험 응시자 편의제공	21
(총괄표) 전략별 세부과제 추진 로드맵	22

I. 수립배경

□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전부개정법률이 시행('23.6.11)됨에 따라 5년 단위 중장기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근거 마련

- 동법 제4조는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확보를 위해 5년 단위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·시행을 의무화함

제4조(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연단위 시행계획 수립의 한계로 체계적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

- 그간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은 1년 단위 해양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각 해경서 및 시·도 단위에서 매년 수립해 활용해 왔으나, 거시적 관점의 계획 부재로, 체계적 안전관리 로드맵 수립에 한계발생

□ 기본계획은 수상레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최상위계획으로, 수상레저 안전정책의 기본목표, 방향 등을 제시

- 향후 해경서 및 시·도지사의 연도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각 수역별 수상레저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필요

□ 미래 수상레저 환경 및 국민수요에 충족하는 안전관리 정책 마련

- 국내 수상레저활동은 레저시장 성장과 연계되어 꾸준히 다변화·세분화될 것으로 전망, 이에 따른 법·제도 정비 및 국민수요를 반영한 수상레저 안전정책 방향 모색

□ 기본계획을 통한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조성 및 레저활성화 도모

- 중장기적 수상레저안전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필요한 시책들이 수상레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II. 국내 수상레저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

1 국내 수상레저 현황

1-1 제도적 환경

□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전부개정 및 「수상레저기구등록법」 제정

- 수상레저에 관한 기본법인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은 2000년 시행 이후 다수의 일부개정을 거치며 복잡하게 구성되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 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한계로 지적

* 조종면허·안전준수·안전관리·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·검사 등 혼재

- 2022년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서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고, 전부개정을 통해 조종면허·사업 등 미비점 보완

* (법안 발의) '20. 12. 15, (본회의 의결) '22. 5. 29, (공포) '22. 6. 10, (시행) '23. 6. 11

〈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〉

구분	주요내용
수상레저안전법 (전부개정)	• “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” 의무화
	•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대여·알선행위 금지(형사처벌)
	• 기상악화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
	• 수상레저보험가입관리 전산망 구축
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(제정)	• 지자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업무에 대한 지도·감독
	•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
	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·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
	• 법인·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양벌규정 도입

□ 미래 수상레저 환경을 반영한 중장기 기본계획 필요성 증대

- 기존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 주체인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1년 단위로 매년 수립
- 수상레저 활동의 증가와 수상레저 환경 및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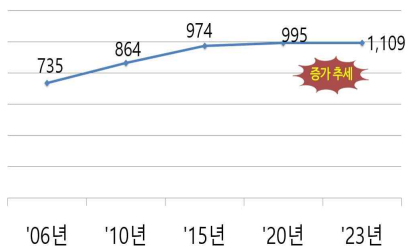
□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안전규제 완화 요구

- 수상레저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규제가 필연적이나, 과도한 규제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
-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한 기반조성은 국가의 의무이며, 효율적 안전규제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
- 수상레저 안전확보와 규제완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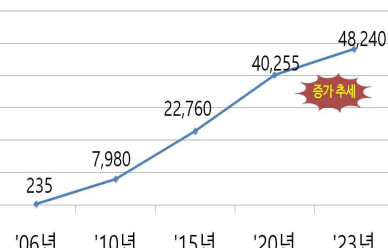
1-2 사회 · 문화적 환경

□ 경제성장과 여가시간 증가로 수상레저 향유 인구 증가

-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적인 것을 벗어나 차별화된 여가 선용을 원하는 계층이 등장하면서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



<사업장 등록 추이(개소)>



<기구 누적등록 추이(대)>



<레저 활동신고 추이(건)>

- 2000년도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시행 이후, 요트·고무보트·수상오토바이 등 기구들이 본격적으로 다양화 · 고급화되면서 전국으로 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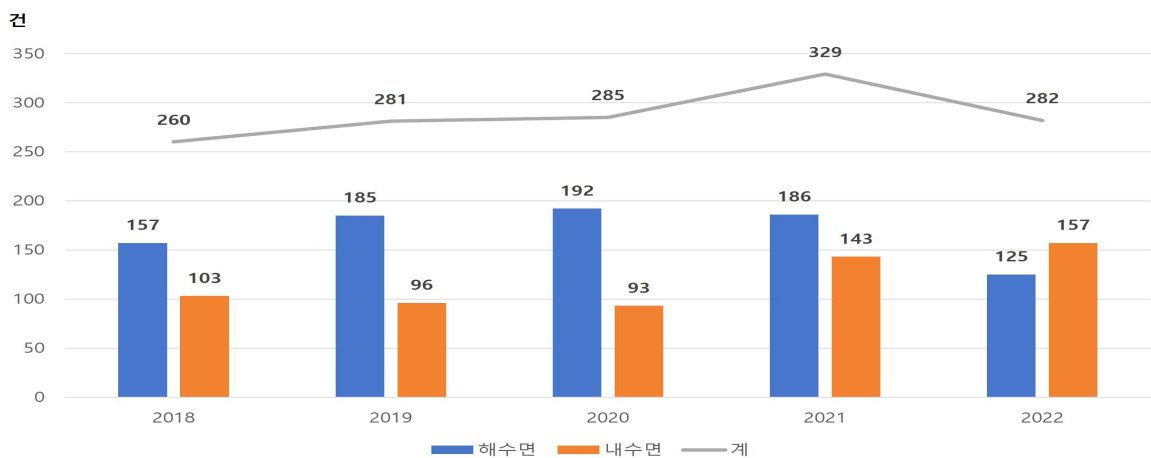
<'80년대 주요활동 기구>

<'00년대 주요활동 기구>

<'20년대 신종 레저기구>

□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꾸준한 유입으로 안전사고 지속 발생

- 지난 5년간 수상레저 사고는 2018년 260건, 2019년 281건, 2020년 285건으로 소폭 증가, 2021년에는 329건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에는 282건으로 감소



연도별 수상레저 사고신고 접수 현황
출처: 대한민국 공공데이터포털(www.data.g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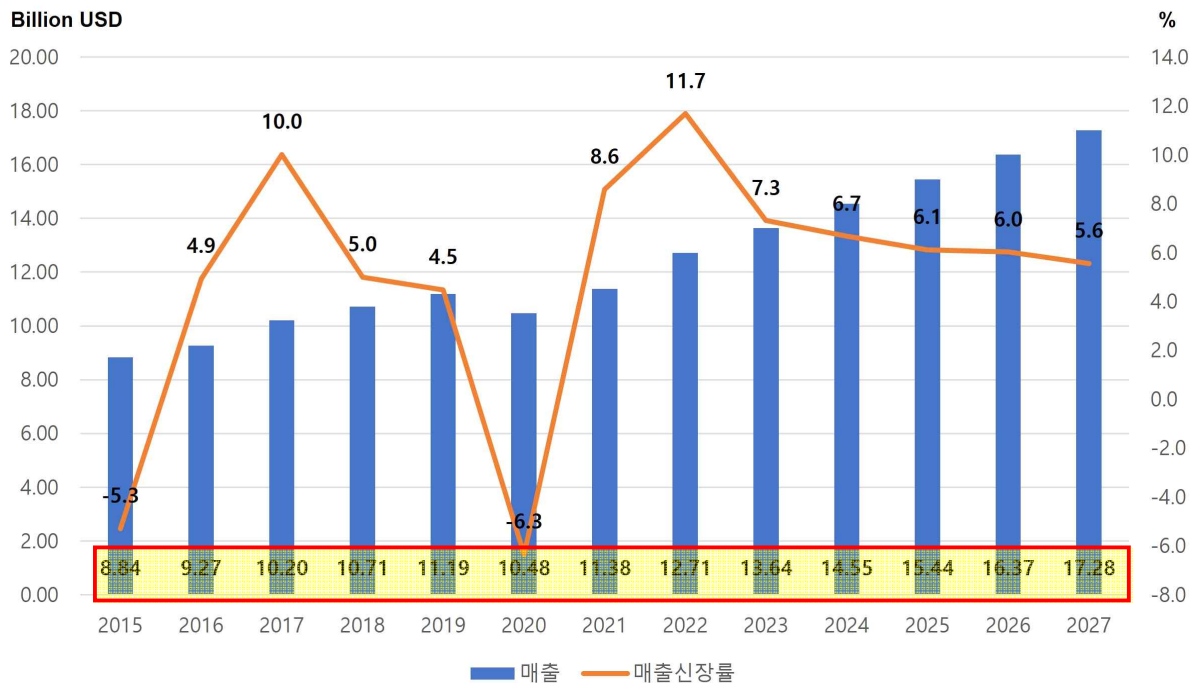
- 2022년 기준 사고발생 원인으로는 운항부주의(77건, 약 62%), 조종 미숙(17건, 약 14%), 선체결함(7건, 약 6%) 등으로 사고발생은 활동자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기본지식 부족에 기인

1-3 경제적 환경

□ 전 세계적인 수상레저산업의 성장

- 수상레저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이며, 세계 수상레저용품 시장규모는 2023년 매출이 136.4억 달러(약 18조) 규모로 성장, 2027년에는 172.8억 달러(약 23조)에 달할 것으로 예상

- 세계 수상레저 매출신장률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역성장 (-6.3%) 하였으나 이듬해 8.6%, 2022년 11.7%의 성장세 회복



세계수상레저용품 시장 규모
출처: 스탯ISTA(www.statista.com)

- 한국의 수상레저용품 시장은 수상레저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나, 수상레저 활동의 확산으로 점차 증가 추세이며 2027년 4천만 달러(약530억)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

□ 국민들의 여가지출 및 여가활동시간 증가

- 여가에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·시간적 여유는 레저활동 수요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, 국민의 문화여가지출율*은 코로나19로 인해 소폭 감소(-4.23%)하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(4.7%) 추세

*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10,000여명 여가지출비용 조사(매년) / 문화체육관광부

- 2022년 기준 한국의 문화여가지출률은 월평균 168,837원이며, 여가 시간은 요일평균 4.2시간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지속 증가


* 하루 24시간 중 여가시간비율은 17.9%로 OECD 33개 국가 중 28위에 해당

1-4 기술적 환경

□ 수상레저산업 발전에 따른 다양한 수상레저기구의 출현

- 수상레저활동의 다변화로 수상레저기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며, 이러한 추세는 수상레저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예상
- 신·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

〈 신종 및 변종 수상레저기구 예시 〉



Power surf board (파워서프보드)	Subwing (서브윙)	Flying boat (플라잉 보트)	Seabreacher (씨브리처)
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프보드 하부에 전기모터 장치 포함된 날개를 부착하여 모터 추진력으로 수상에서 부양한 형태로 탑승 - 무동력기구에 동력장치를 결합한 형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터보트 등이 수상에서 견인하는 날개 형태의 보드를 이용자가 수중에서 잡고 스노클링 - 견인수상레저기구와 수중레저 활동이 결합한 형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기주입식 보트에 행글라이더의 구조의 날개를 결합하고 이를 모터보트 등이 견인하여 수상 주행 및 비행 가능 - 행글라이더와 유사한 레저기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터추진 보트 형태의 신종레저기구로 일시적으로 잠항할 수 있고 수면 위로 짧은 시간 도약 가능함 - 반잠수 스타일 제트스키 레저기구

□ ‘디지털 사회로의 전환’에 따른 수상레저 행정서비스 개선

- ICT 기술의 발전,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 등으로 사회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비대면·디지털 정책환경 도래
- 수상레저 행정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디지털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‘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’ 고도화 사업 완료('23.11월)

* (기간) '21~'23년, (비용) 약 40억원, '23년 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구축



□ 미국

- 정부의 역할은 후원 또는 지지의 형태로 일부 제한적이며, 민간 주도로 수상레저안전 관련 계획이나 활동 추진
 - 연방정부 차원의 개입이 없으며 주정부의 제한적 참여
- * (테네시주 ) 보트운행을 위해서는 주에서 발급한 보트안전교육 이수증 소지 의무
- ** (사우스다코다주 ) 보트 소유운항자는 미국해안경비대의 교육프로그램 수료 권장
- 민관 협의체인 수상안전협의회가 실질적 안전관리 업무 수행
 - 중장기 계획인 수상안전실행계획(2023-2032) 수립*, 수상안전 및 익사예방에 대한 전국적 공조체계 구축
- * 주정부·지역공동체 등이 자체 수상안전실행계획 수립토록 가이드라인 제시

□ 일본

- 국토교통성 산하 해상보안청이 수상레저안전 업무 총괄기관으로서 2023년 제5차 교통비전(5개년)에 해양레저 안전관련 사업 제시
 - 플레저보트 기관 고장·조종경험 적은 자를 위한 대책
 - 안전에 관한 이해·교육을 위한 개인과 단체와의 협동 대책
 - 해상보안청 직원들의 현장지도체제 강화 대책 제시
- 공익재단법인 형태의 ‘마린스포츠재단’, ‘하천재단’ 등 운영
 - 주요사업으로 친수사업, 안전 이해·교육사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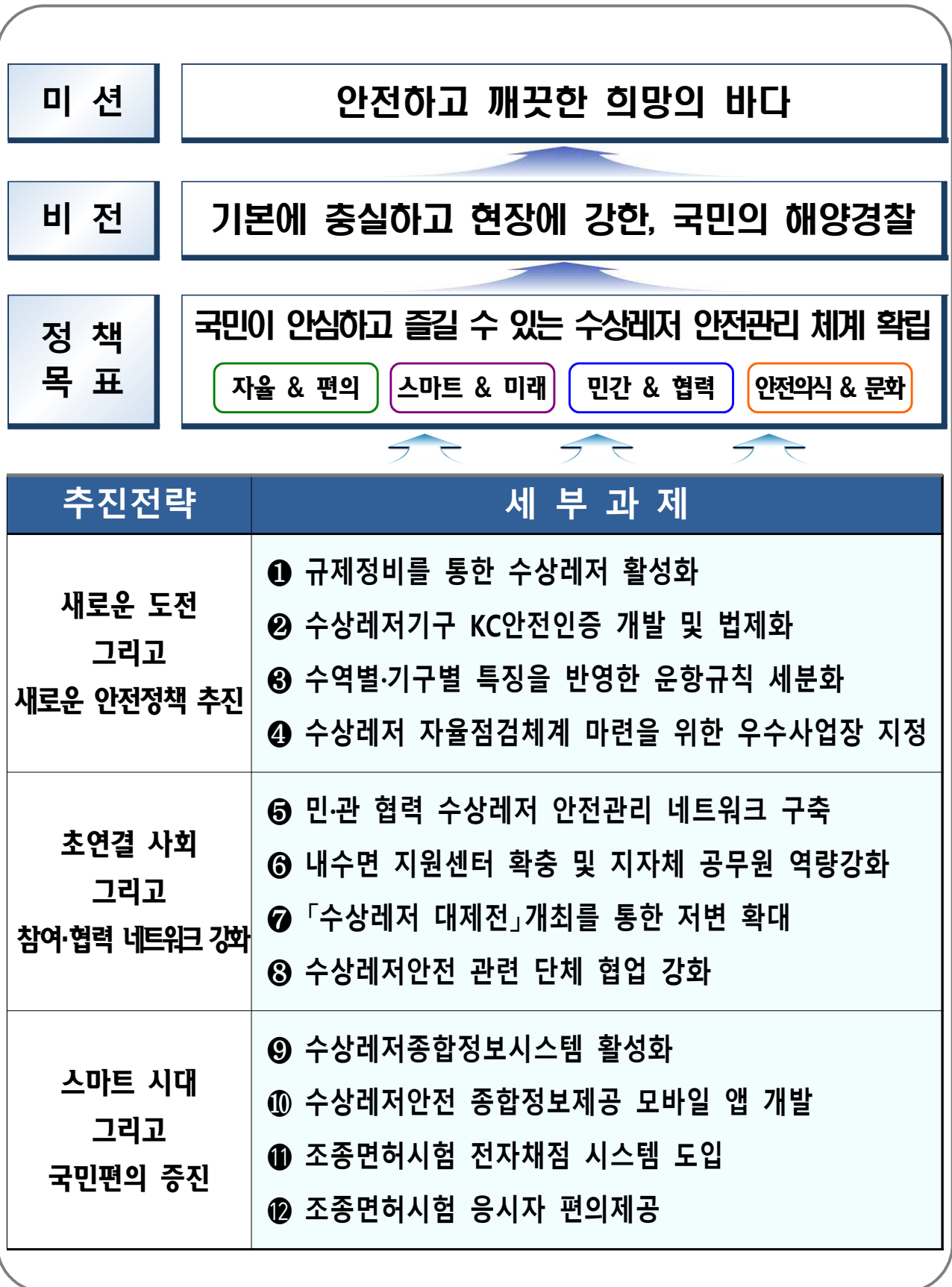
□ 호주

- 공공(중앙·지방정부)과 민간의 공조를 통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추진
 - 중앙정부 차원의 수상레저안전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
 - * 의료, 보건, 복지시스템과 더불어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소관
 - 지방정부는 각 주마다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
 - * (빅토리아 ) 수상안전전략 '21-'25 / (뉴사우스웨일즈 ) 수상안전지침 등
- 수상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활동이 활발하게 전개
 - 민관공동기구로 호주수상안전위원회(호주수상안전전략, 익사자 50% 감소 목표, 5개 영역 설정)가 수상안전에 관한 자문역할 수행
 - * 익사사고 근절을 위한 5개 영역 : 사람, 장소, 활동, 인구, 위험요소

□ 영국

- 호주와 마찬가지로 공공·민간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 수행
 - 교통부 산하 해사연안경비청이 수상레저 안전업무 총괄, 안전관리계획 수립 참고서로 해변안전관리 제작
 - * 해변안전관리는 각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식의 자가진단을 제시, 해변안전 관련된 현행법 소개
- 민관협력단체인 수상안전포럼이 수상안전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수상안전사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핵심역할 수행
 - *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수상사고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간
- 민간단체인 왕립사고예방협회와 왕립인명구조협회가 수상레저 시설관리 자격증, 인명구조 자격증 등 다양한 과정 운영

III.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체계



IV. 전략별 추진과제

전략1

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안전정책 추진

1 규제정비를 통한 수상레저 활성화

□ 추진배경

- 국민의 시각에서 수상레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은
규제로 인식, 안전관리 규정과 규제개선 간 이해충돌 발생
- 수상레저 활성화와 안전관리의 균형적인 발전방향 모색 필요

□ 추진내용

- (T/F 운영) 단발적 대응중심의 규제개선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
지속발굴·이행위한 수상레저과 內 규제혁신 T/F 구성·운영
 - * 내·외부 위원으로 구성, 총리실 산하 '규제혁신추진단'과 규제개선 협의 지속
- (규제 회의) 규제개선 소요파악·성과 점검 등 논의 위한 점검회의 정례화
- (대국민 의견 수렴) 수상레저 활동자·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
으로 과제발굴 위한 공모전 및 간담회 개최

□ 추진계획

【 추진: ■ 시행: ■ 】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규제개선 T/F 구성 (필요시 매년 구성)	■	■	■	■	■
규제개선 회의 (매년 시행)	■	■	■	■	■
대국민 의견 수렴 (매년 시행)	■	■	■	■	■

□ 추진배경

- 모터보트 등 4종의 안전검사 대상* 외 무동력 수상레저기구, 신·변종 레저기구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기준 부재

* 모터보트·세일링요트(20톤 미만), 고무보트(30마력 이상), 수상오토바이

- 이와는 달리, 국내에서는 공기주입형 물놀이기구, 국외에서는 카누·카약·서프보드 등의 안전인증기준 충족을 의무화

□ 추진내용

- **(인증기준 개발)** 수상레저기구별(총 27종) KC안전인증 기준, 인증제도·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4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연구·개발

* '24년 2년차 사업 진행 중, 년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 개발

- **(법제화 추진)** 레저기구 수입·제조 시 위해도에 따라 제품 시험·검사, 공장심사 등을 거쳐 KC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

수상레저기구 KC안전인증 법제화 로드맵

- ✓ **(개요)** 수상레저 R&D 1년차 사업('23년)을 통해 도출된 KC안전인증제 법률 제·개정안을 토대로 의원입법 추진(대표발의 의원실 협의, 입법공청회 개최)
- ✓ **(추진 시기)** '24년 하반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구성 종료 시 추진
- ✓ **(입법 형식)** 전부개정* 또는 신규 법률 제정 * 「수상레저기구등록법」 전부개정(잠정)
- ✓ **(하위법령 입법)** '25년 상반기 법률안 공포를 목표로 하면서, 그 결과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 입안 및 법제처 심사(시행 '26년 목표)

□ 추진계획

【 준비: ■ 추진: ■ 시행: ■ 】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수상레저기구 인증기준 개발	■	■	■	■	■
KC안전인증 법제화	■	■	■	■	■

□ 추진배경

- 최근 파도 등의 영향을 작게 받는 내수면 마리아나 활성화 추진*
추세와 더불어, 수역별 신종 기구가 등장**하는 등 인프라 변화

* 해수부 2차 마리아나항만 기본계획('20년~'29년), 내수면 15개소 마리아나항만 예정구역 선정

** 내수면(인공파도 만드는 웨이크서핑보드), 해수면(잠항하는 돌고래보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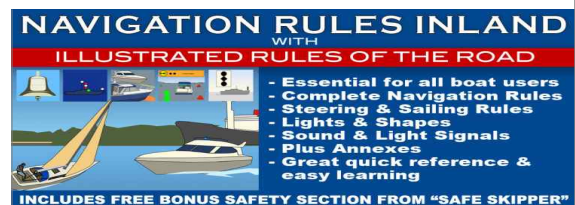
-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운항규칙의 경우, 해수면 중심 포괄적인 내용*
위주이므로, 내수면 및 기구별 특성이 미 반영되어 고도화 필요

* 「해사안전법」의 항법 및 기상특보 시 활동제한 등 일반적인 사항 규정

내수면 운항규칙 해외 사례

- ✓ (미국) US Inland Navigation Rules
- ✓ (유럽) CENVI-European Code for Inland Waterways

※ 영국의 경우, AINA(Association of Inland Navigation Authorities)를 통해 4,000마일 이상의 내륙수로 관리



<미국 내수면 항법 규칙>

□ 추진내용

- (규칙 마련) 미국·호주 등 선진국의 수역별 구분된 운항규칙 분석과 함께 수상레저기구별 특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추진
- (의견 수렴) 수역별 안전관리 주체(해경서, 지자체) 및 레저활동자, 사업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운항규칙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
- 연구용역·수요조사 결과 바탕으로, 「수상레저안전법」 개정 추진

□ 추진계획

【 준비: ■ 추진: ■ 시행: ■ 】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연구용역 및 수요조사					
법령 개정					

□ 추진배경

- 레저사업 확대*(사업장 증가, 신종기구 등장)로 인해 해경(해수면), 지자체(내수면)의 직접적 안전관리 한계, 안전사고 예방 위한 대체수단 필요

* '09년 837개소 → '23년 1,027개소(120% ↑), 전동서프보드 등 신종 기구 등장

- 단속을 통한 사후관리로는 일정 한계에 도달, 자체 예방 노력으로 무사고 달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'우수사업장' 제도 도입 필요

□ 추진내용

- (기준 마련) '우수사업장' 선정기준(규모, 무사고 등) 및 체크리스트 마련
- (인센티브 제공) '우수사업장'에 대한 대국민 홍보, 안전검사 유예, 현판 제공 등 안전사고 방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동기부여

【 유사 '우수사업장' 인센티브 사례 】

분 야	에너지효율향상	근로자 건강증진활동	위험성평가
주 체	한국에너지공단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인센티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너지진단 면제 - 해외 산업시찰 기회 제공 - CEM Energy Management Leadership Award 신청 지원 ('16년, '17년 국내 사업장 2개소 수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용노동부 실시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 관련 분야 감독 유예 가능 - 3년간 정보포상 우선 추천대상자 - 건강증진활동 추진 비용 우선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재보험료 20% 인하 - 클린사업장 조성 보조금 천만원 추가 지원 -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요율 0.2p 감면

- '우수사업장' 신청절차, 기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법제화 추진

□ 추진계획

【 준비: ■ 추진: ■ 시행: ■ 】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우수사업장 선정기준, 인센티브 등 마련	■	■	■	■	■
우수사업장 반영 법령 개정			■	■	■

5 민·관 협력 수상레저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

□ 추진배경

- 카누·서핑 등 동호회, 개인 레저활동 증가와 정비불량으로 인한 표류 사고 증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자율적 민간주도 안전관리 필요

*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의 높아진 안전욕구 충족을 위해 민·관 협력체제 마련

□ 추진내용

① 수상레저 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현장에 적합한 정책 마련

- (자문위 구성) 기구별 동호회, 서핑·요트협회, 학계,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「수상레저안전정책자문위」 발족

* 중앙(본청)과 지역별(지방청) 협의체 구성(년2회 정례회의 개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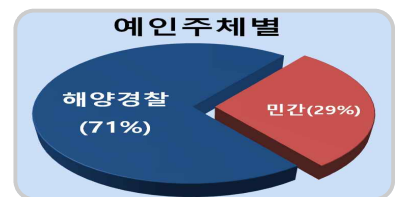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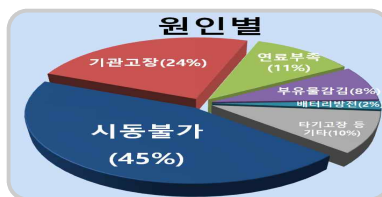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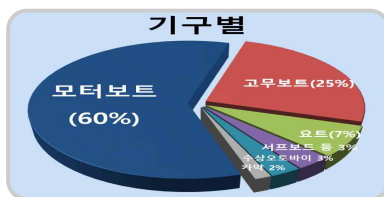


② 활동자 중심의 민간 자율 예인체계 구축

- (표류 사고) 레저기구 기관고장·연료고갈 등으로 인한 단순표류 사고가 지속 발생('21~'23년 1,993건)중이며, 경비함정 전인증가로 치안공백 발생

【표류사고 발생현황】

(통계현황 : '23년 613건)



- (자율 예인체계) 모터보트·카약 등 동호회 대상 간담회·교육을 통해 자체 안전교육(기구점검 등), 예인 네트워크 등 활동자 중심의 예인체계 구축

□ 추진계획

【 준비: ■ 추진: ■ 시행: ■ 】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수상레저안전자문위 발족 및 운영	■	■	■	■	■
민간 자율적 예인체계 구축	■	■	■	■	■

□ 추진배경

- 내수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지자체 공무원의 인력, 현장집행력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 안전관리 지원체계 마련
 - * 지자체 지원요청 시 경찰서 직원 차출 형식에서 상시적 지원체제로 개선 필요
- 지자체 수상레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발령 및 업무겸직(재난 관리 등)으로 인한 안전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 역량강화 필요

□ 추진내용

① 내수면 안전관리 지원강화를 위한 「수상안전지원센터」 확충

- **(추가 설치)** 현재 운영중인 강원도(사업장 최대등록, 159개소)에 이어 안전관리 수요가 많은 경기도, 경북에 「수상안전지원센터」 신설
 - * 주요임무 : 인력·장비 등을 활용, 상시 내수면 안전관리 업무지원(지도·단속, 교육)

② 지자체 수상레저 담당 공무원 및 안전감시원 역량 강화

- **(지자체 공무원)** 레저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법령, 지도·단속, 사업·기구 등록 절차 교육을 위해 「내수면 수상레저안전관리」 교육 정례화
 - * 장소/대상 : 해양경찰교육원(3일과정) / 30명(1년 미만 담당공무원 필수 이수)
- **(안전감시원)** 수상레저 성수기(6~9월) 사업장 안전점검, 음주운항 등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안전감시원 교육지원
 - * 안전위해요소 감시 및 채증요령, 인명구조법 등 교육(수상안전지원센터 주관)

□ 추진계획

【 준비: ■ 추진: ■ 시행: ■ 】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교육과정 정례화 (매년시행)	■	■	■	■	■
수상안전지원센터 확충	■	■	■	■	■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미래 해양레저 · 관광 트렌드는 휴식 · 힐링 · 건강 등이 중심이 될 전망, 체험과 볼거리가 어우러진 「수상레저 안전스포츠제전」 개최* 추진

* 현행 「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」를 카누, 카약 등 동호인 참여 대회로 확대 개편

참고: 해수부 주관 제15회 해양스포츠제전('22년, 군산)

- ✓ (개요)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매년 각 지자체의 유치 신청을 받아 개최, 요트 · 핀수영 · 카누 등 경기와 레저기구 체험 실시(국비 등 약 15억원 소요)
- ✓ (효과) 선수, 관광객 등 10만명 이상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

□ 추진방안

- (기본계획 마련) 해수부 및 지자체 유사 행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대회운영, 프로그램 구성 등 내부 검토 및 외부 자문*을 통해 기본계획 마련

* 기존 대회 분석 및 타부처 사례 검토를 통한 특화 · 차별성 확보(필요시 연구용역)

- (예산 마련) 지자체 · 단체 대상으로 대회 개최를 통한 수상레저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감대 형성, 대회 예산 지원방안 협의

수상레저 안전스포츠제전 프로그램(안)

- ✓ (대회) 전국 요트대회, 동호회별 카누 ·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회
- ✓ (체험) 카누, 카약, 서프, SUP 등 레저기구 체험 및 수상안전교육 등
- ✓ (행사) 레저기구 전시회(포토존), 요트숙박, 문화예술공연 등

□ 추진계획

【 준비: ■ 추진: ■ 시행: ■ 】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마련	■	■	■	■	■
대회예산 확보 및 개최	■	■	■	■	■

□ 추진배경

- 다양한 신종레이저기구의 등장, 안전기준 마련 요구 속에서 법·제도 만으로는 현행 수상레이저 환경의 변화 추세를 따라가기에 한계

* 신종레이저기구 검사기준,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선제적 연구·관리 전담기관 필요

** 국가기술표준원(산업부), 소방산업기술원(소방청)은 인증제도 전담 관리

- 수상레이저 관련 단체 (면허시험, 안전검사 등 대행) 역할을 재정립하여 안전관리 및 레이저산업 동반 발전을 위한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

□ 추진내용

- (국가위탁사무 재정립) 수상레이저 대행기관별 각 사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재정립하여 국가 위탁사무(면허시험·안전검사 등)에 대한 공정성 확보
- (역할 조정) 수상레이저안전법에 근거한 법정단체 및 민간단체 협업을 통해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
- (수행사무 추가발굴) 전문기관 외에는 수행이 불가능한 “수상레이저기구 인증제” 개발(제부과제2)에 따른 단계적 업무 확대 추진

□ 추진계획

【 준비: ■ 추진: ■ 시행: ■ 】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관련 단체별 국가위탁사무 재정립	■	■			
역할 조정 (법정단체 및 민간단체)			■	■	
수행사무 추가발굴					■

9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레저사고 대부분이 안전불감증(운항부주의, 정비불량 등)에 의해 발생하나, 수상레저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로 부재

* (현황) 해양경찰서 단위 대인 방식, 인쇄물 등 오프라인 대면 홍보 위주

□ 추진방안

- (원스톱(One-stop) 서비스 온라인 시스템) 법령·안전정보 등 수상레저 관련 모든 정보를 한번에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* 현재 운영중인 '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' 고도화 지속 추진



- (안전관리 정책 수립) 축적된 데이터는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분석·가공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 수립시 활용

□ 추진계획

【 준비: ■ 추진: ■ 시행: ■ 】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	■	■	■	■	■
안전관리 정책 수립	■	■	■	■	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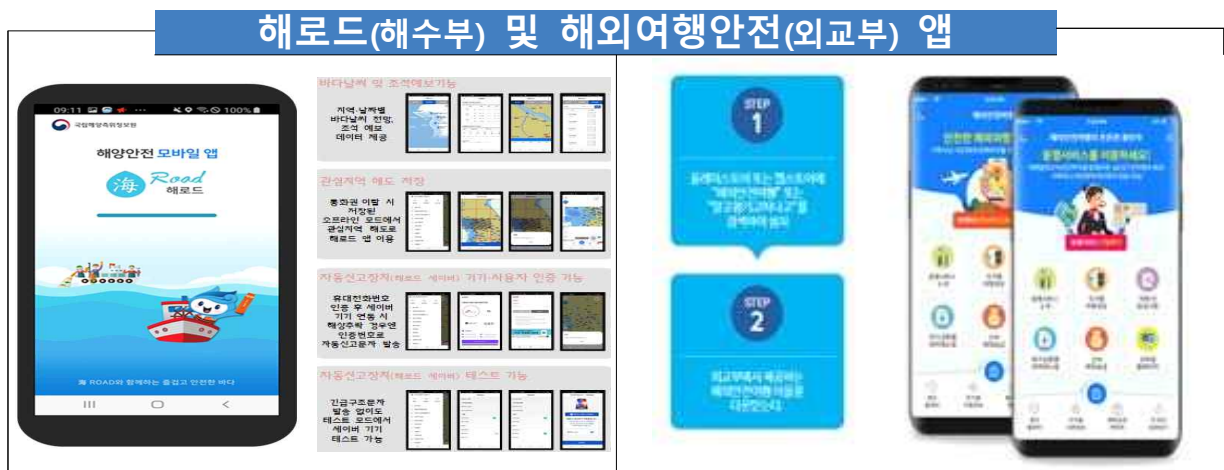
10 수상레저안전 종합정보제공 모바일 앱 개발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수상레저 관련 정보는 웹 기반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운영
- 수상레저 활동신고, 구조요청, 수상레저 활동 위치 관련 신고 및 정보 취득을 강화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 모바일 앱 개발 필요

□ 추진방안

- 해수면 및 내수면의 수상레저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·운영
 - (주요 콘텐츠) 수상레저 주요 법령, 기구별 안전수칙, 사고예방 동영상 등
 - (주요 기능) 수상레저 금지구역 및 사고다발지역 진입 시 알람 및 안내 문자 발송, 위급상황 시 구조요청 등
 - (신고 기능) 근·원거리 수상레저 활동, 기상특보시 활동 신고 등



□ 추진계획

【 준비: ■ 추진: ■ 시행: ■ 】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수상레저안전 모바일 앱 개발	■	■	■	■	■

11 조종면허시험 전자채점 시스템 도입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조종면허 실기채점을 전자화하여 시험관의 주관에 의존하는 기존 실기채점 방식의 취약점을 탈피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시험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필요

□ 추진방안

- 전자채점에 기반한 조종면허 평가시스템 개발, 설치, 시범 운영 및 개선제도 운영 추진
 - (실시간 전자채점 시스템 개발) 무선데이터 통신망, 센서 등 활용
 - (전자채점 인프라 구축) 조종면허 시험장에 통신망 구축, 센서 등 설치
 - (전자채점 운영 시스템 개발) 채점용 전자패드, 거리측정, 항적 구현 등
 - (확대 운영) 선별된 시험장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시험장 확대 운영



□ 추진계획

【 준비: ■ 추진: ■ 시행: ■ 】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전자채점 시스템 개발	■	■	■	■	■
전자채점 확대 운영	■	■	■	■	■

12 조종면허시험 응시자 편의제공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전국 조종면허 PC시험장(23개)이 해양경찰서 민원실 등에 위치하고 있어 내륙지역 거주자·고령자는 원거리이동으로 시험응시에 불편
 - * 면허 취득자 연평균 증가율 8.6% ↑, PC시험 가능인원 117명으로 한정
-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정 이후 신체 장애인이 조종면허를 취득하였지만 장애유형·정도별 특성 고려한 편의시설 및 제도 미비

□ 추진방안

1 조종면허 온라인 시험 시스템 마련

- (온라인 시험) 장소, 응시인원(동시접속 1만명)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해양경찰청 시험서버에 접속하여 온라인 시험 시스템 마련
- (공정성 강화) 감독관의 업무*를 안면인식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신분증 확인 시간 단축 및 사각지대 없는 화상감독
 - * 조종면허시험 응시자 신분증과 얼굴 대조, 부정행위 방지, 시험절차 안내 등

2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종면허시험 편의제공

- (지원센터 설치) 신체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, 운동능력 측정, 면허시험, 안전교육까지 면허취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실시



□ 추진계획

【 준비: ■ 추진: ■ 시행: ■ 】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온라인 조종면허 시스템 구축	■	■	■	■	■
장애인 지원센터 설치	■	■	■	■	■

추진전략	세부과제	구분	'24	'25	'26	'27	'28
1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안전정책 추진	① 규제정비를 통한 수상레저 활성화	규제개선 T/F 구성(필요시 매년 구성)	■	■	■	■	■
		규제개선 회의(매년 시행)	■	■	■	■	■
		대국민 의견 수렴(매년 시행)	■	■	■	■	■
	② 수상레저기구 KC안전인증 개발 및 법제화(R&D, '23~'26년)	수상레저기구 인증기준 개발	■	■	■	■	■
		KC안전인증 법제화	■	■	■	■	■
	③ 수역별·기구별 운항규칙 세분화	연구용역 및 수요조사	■	■	■	■	■
		법령 개정					■
	④ 수상레저 자율점검체계 마련을 위한 우수사업장 지정	우수사업장 선정기준, 인센티브 등 마련	■	■	■	■	■
		우수사업장 반영 법령 개정			■	■	■
2 초연결 사회 그리고 참여·협력 네트워크 강화	⑤ 민·관 협력 수상레저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	수상레저안전자문위 발족 및 운영	■	■	■	■	■
		민간 자율적 예인체계 구축	■	■	■	■	■
	⑥ 내수면 지원센터 확충 및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	교육과정 정례화(매년시행)	■	■	■	■	■
		수상안전지원센터 확충	■	■	■	■	■
	⑦ 「수상레저 대제전」 개최를 통한 저변 확대	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마련	■	■	■	■	■
		대회예산 확보 및 개최	■	■	■	■	■
	⑧ 수상레저안전 관련 단체 협업 강화	관련 단체별 국가위탁사무 재정립	■	■			
		역할 조정(법정단체 및 민간단체)			■	■	
		수행사무 추가발굴					■
3 스마트 시대 그리고 국민편의 증진	⑨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	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	■	■	■	■	■
		안전관리 정책 수립	■	■	■	■	■
	⑩ 수상레저안전 종합정보제공 모바일 앱 개발	수상레저안전 모바일 앱 개발	■	■	■	■	■
	⑪ 조종면허시험 전자채점 시스템 도입	전자채점 시스템 개발	■	■	■	■	■
		전자채점 확대 운영	■	■	■	■	■
	⑫ 조종면허시험 응시자 편의제공	온라인 조종면허 시스템 구축	■	■	■	■	■
		장애인 지원센터 설치	■	■	■	■	■